

여수산단 대기업 미세먼지 배출 조작



오염물질 눈속임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LG화학 여수공장 전경. LG화학은 17일 논란이 일자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공식 사과했다.

LG화학·한화케미칼 등 235개 사업장 측정업체와 '짬짜미' 글로벌 '일류' 표방하고도 '삼류' 환경·안전 행태 드러나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일류' 기업을 표방해온 국내 대기업들의 국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은 '삼류' 환경·안전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해 배출한 여수산단 내 기업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 물

질 측정대행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단지 지역 4곳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으로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에는 ㉠ LG화학 여수화지공장, 한화케미칼 ㉡ 여수 1·2·3공장, ㉢에스엔씨, 대한시멘트 ㉣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 아스콘 등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나머지 200여개의 배출사업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확인중이다.

측정대행업체 4곳은 여수산단 등에 위치한 235개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은 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 조작하거나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무려 1만3096건에 이르는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했다는 게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의 설명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은 8843건의 경우 아예 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로 측정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또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의 33.6% 수준으로 측정값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청은 특히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166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해도 이상 없다고 조작하는가 하면,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았다는 게 환경청 설명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 과정에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SNS 문자를 확보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청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메일로 보내주신 날

짜와 농도로 만들어 보내드리면 되나요?"라고 묻자, 몇 마디 주고받은 뒤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로 다 맞춰주세요"라며 측정업체와 의뢰 업체 직원 간 조작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배출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검찰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행태가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에도 주목,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들 행위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뿐 아니라 지역민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조속하게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5·18 진상조사위 구성 또, 정쟁 '희생양' 되나

/ 뉴스초점 /

민주·한국 5월 이전 처리 가다 선거제도 패스트 트랙 등 여야 쟁점 많아 '산 넘어 산' 민주당 내부 위원 재추천 논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구성이 여야의 대치 국면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된다.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를 앞두고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쟁점 법안과 현안에서 강력한 대치 국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하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5월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일정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쟁점 법안과 현안을 감안하면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만만치 않다. 우선 18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의 패스트 트랙(신속안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반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린다면 진상조사위 구성은 유탄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 트랙 추진 철회 없이는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여야가 다시 접점을 찾기 전에는 상당 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진상조사위 구성에 어느정도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오는 19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이 다시 경색될 수밖에 없어 진상조사위 구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대야 투쟁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두 트랙으로 가지 않는다면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와 진상조사위 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조사위원 재추천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윤진 진상조사위 조사위원 후보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조사위원을 양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국당과 밀실에서 정치적 밀을 통해 조사위원 추천을 다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5·18 진상조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 ... 77일 만에 석방

법원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

다. 또 자신의 재판관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분이 예견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조현병 환자 '묻지마 범죄' 공포 ▶6면

예술 꿈나무들의 큰 잔치 제 64회 호남예술제 개막 ▶16면

77 광주일보 창사 77주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발전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